

# 영월댐건설반대성명서

남한강의 항구적인 홍수예방과 수도권 생활용수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는 영월댐 건설에 대해 주민의 생존권보호와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우리주민의 입장을 무시한 채 21세기 최대의 국토 파괴행위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하여 평창군민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영월댐 건설은 엄연한 주민의 생존권 침해행위이다.**

- 영월댐건설로 수몰되는 우리군 지역주민은 총98세대 292명이며, 수몰지역 인근에는 약700여세대 2,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 이 지역은 몇년 전만해도 크고 작은 관광이 개발되어 지역경기가 활발했으나 석탄합리화 산업에 의하여 관광이 폐광됨에 따라 지역경기는 침체되었고 그나마 기대했던 관광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지역에 제외되는등 대책없는 정부정책에 이증으로 고통받은 쓰라린 과거가 있는 주민이다.
- 지금은 뼈아픈 과거를 운명으로 여기며 나름대로의 새로운 생활을 개척하고 있으나 정부의 영월댐 건설계획에 따라 다시 주민이주라는 고통과 위기를 겪게되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책수립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가령 댐건설이 추진되어 수몰지역 주민이 이주된다고 하자, IMF 구제금융의 국가적 어려움과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수물지역 주민의 생존권은 이땅에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는가?

- 또한 농산물가격 불안정과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병충해로 성공 농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댐건설로 인한 기후변화는 주민의 생활권 침해와 생계수단인 성공농업을 더욱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하다.

**둘째, 백룡동굴 등 자연, 환경, 문화보고의 파괴이다.**

- 영구보존용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은 동굴의 규모, 2차 생성물, 다양한 회귀동굴생물등이 존재하고 있어 역사·학술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유산이며,
- 동강일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동식물이 분포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자연경관이 가장 뛰어나 각종 연구학자들도 감탄하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최근 영월댐 건설이 국민적 환심사가 되자 각종 언론에 의해 보도된 자연경관을 확인하기 위해 동강을 둘러본 국민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동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돌아간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 환경, 문화적 유산은 우리국민이 반드시 지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셋째, 댐 수물지역에 대한 안전성 문제이다**

- 수물지역은 석회암지대이고 수많은 동굴과 지하공동이 존재하고

있어 이 지역으로 물이 쉴 수 있다는 것이 공통임에도 정부가 댐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안전성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댐건설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댐건설 목표의 당위성 문제이다.**

- 정부의 영월댐 건설의 최대의 목표는 남한강의 홍수피해 경감과 수도권 생활용수 공급에 목표를 두고 있다
- 그러나 동강지역은 석회암 지대로서 수질등급이 낮고, 알칼리성으로서 한강식수원 목표수질등급 1등급 달성과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이용이 불가하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급수인 상태에서 댐이 건설되면 여름철의 오염도가 높아질 것으로 환경관련 단체는 예측하고 있으며,
-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건설한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댐이 건설되었음에도 홍수피해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또한 외국의 경우 환경보호차원에서 건설되어 있던 댐도 파괴하는 반면 우리는 천혜의 자연보고를 파괴하면서 까지 대규모 댐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환경보호를 고려한 댐건설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국가경제 재건을 위하여 모든 재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당면한 현실의 부정과 국민적 혼란까지

일으켜가며 5천 1백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재원을 댐건설에 투자하는 것은 정부의 재원투자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다섯째, 정부의 댐건설 조기발표 문제이다.**

- 정부의 댐건설 의도는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댐의 안전성과 자연환경보호라는 중요한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있고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국민적 관심사로 제기되어 전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동감지키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 토지보상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 언제라도 착수가 가능하다는 공사착수 가능성 표명과 오는 10월 댐건설을 착수한다는 무책임한 발표는 피해주민 반대나 온 국민적 의견에 굴복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며
-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민의 존엄한 가치인정과 행복추구권,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헌법 위배행위일 것이다.

#### **여섯째, 댐건설 취소후 수몰지역으로 고시된 주민에 대한 지원 문제이다**

- 수몰지역 주민은 농경지 약1ha미만의 영세농가로서 댐건설계획 발표이후 각종 지역개발사업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며, 특히 이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업기반시설등이 지원되지 않았다.
- 또한 각종 인·허가 제한으로 인한 주민생활권 침해로 주민 모두는 실의에 빠져 삶을 포기한 상태로서 댐건설계획 발표에 따른 피해 주민의 특별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평창군민의 생존권보장과 백룡동굴등 천혜의 자연  
보고를 보호하려는 우리군민의 뜻을 무시하려는 정부에 대해  
우리의회는 평창군민을 대표하여 반대입장을 밝힌다.

앞으로 우리는 정부의 영월댐건설 강행방침에 대해 영월·평창·  
정선 군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의 뜻에 동감하는 국민, 각종  
기관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것을 천명하며,  
국민적 여론을 수용한 영월댐건설 백지화라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9. 4 . 26 .

**평창군의회 의원일동**